

대정부투쟁 나선 野…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대검찰청·법무부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현장 규탄대회
나경원 “진실의 문에 대못 박아”
송언석 “누가, 언제, 왜” 외압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사퇴 촉구도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단체행동으로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받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중합청사 앞에서 법무부 현장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다.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

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과천 법무부를 찾아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

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다. 오랜 친구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을 파괴 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자백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며 “‘시위 소란’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가까운 국민의 세금을 그란 총 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시위소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생경제 회복 집중… 물가안정·주식·내란극복 살펴

李 대통령, 제49회 국무회의 주재
물가 담합 현황, 세제혜택 등 점검
‘헌법존중정부혁신 TF’ 논의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다자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잠시 숨을 돌린 뒤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는 식품 물가 안정을 당부했으며, 주식 장기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12·3내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



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김강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

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물가 담합 점검 현황을 확인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잘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하냐”고 물었다. 이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좀 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짚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내 12·3내란 가담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동의하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

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제,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설명했다.

TF 구성 이유는 내란 가담자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국정동력을 저하해서다. 김 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TF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대통령실, 내달 중순쯤 청와대 순차 이전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시대’
보안 문제에 관저 이전은 ‘아직’

대통령실이 12월 중순쯤 용산의 대통령집무실 등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개막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청와대 연내 이전’은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비서관실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내달 20일까지 이전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달 8~14일 설도 나왔으나, 이보다는 늦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청와대 조직과 기자실(춘추관)까지 있는 상황이라, ‘이사’ 작업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여민관(업무동)을 비롯해 청와대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보안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3년 넘게 ‘집을 비운’ 상태다 보니, 건물이 노후화된 곳이 많다고 한다. 또 개방을 하면서 시설물이 파괴된 곳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노후화된 곳으로 꼽히는 여민관은 예산 절약을 위해 최소한 정도로만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근 풍경도 변했다. 2022년 개방 이후 춘추관 앞에 넓게 깔렸던 보도블록도 사라졌고, 청와대를 둘러싼 외벽에 걸려 있던 그림들도 사라졌다. 해당 그림은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청와대 개방 이후 걸렸다. 청와대 인근 도로에 있던 초소들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와대 앞길에는 곳곳에 경찰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시점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연 말까지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청와대 개방과 함께 관저도 개방됐던 만큼 보안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기존 관저 대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서예진 기자

“국내 OTT 육성 위해 IP확보 정책 필요”

최형두·박정하 野 간사 국회 토론회

국내 콘텐츠 IP(지식재산권) 산업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OTT 허브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산업 정책 방향을 돌아보는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와 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네타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야당 간사)은 “글로벌 OTT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OTT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조원

의 기금을 만들고 전략위원회라든가 민간이 매칭되고 펀드가 확산되면 IP주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새 마중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여당 간사)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기반은 취약하다”며 “문체위에서 투자 방식과 투자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떻게 모네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OTT 생태계를 튼튼히 갖추고 국제적인 IP 비즈니스 토대까지 갖춰야 IP주권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의 문화적 파급력 때문에 글로벌 OTT 파워에 의존하는 순간 IP는 넘어가는 것”이라며 IP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